

# 연구노트

-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최인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패널 분석

김영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통한 대표성 증진방안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최인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증가

노년기 돌봄은 일반적으로 노인이 돌봄을 받는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sup>1)</sup>로 많은 노인이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노년기에 손자녀를 양육하거나 노인이 자신의 (시)부모를 돌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노인이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특히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는 추후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년기가 장기화되면서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노년기에 경험하는 가족돌봄은 의미있는 과업이기는 하지만 여성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노인에 의한 배우자 및 손자녀 돌봄 현황, 여성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주요 제도 및 제도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지원 욕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 여성노인과 가족돌봄

우리사회의 성 역할(gender role)이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주된 양육자이자 가족돌봄자로 여겨진다(Hooyman & Kiyak, 2008). 이에 여성노인은 생애주기상 ‘돌봄자’로 가져왔던 정체성을 노년기에 도 일정 부분 유지하며 스스로 자신이 가족의 주된 돌봄자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도 여성노인이 가족돌봄일을 수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여성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며 가족의 안녕과 사회유지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돌봄일은 사회에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것도, 사회적 관심이 미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1) 고령화,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 경제활동에서 2인 소득자 모형의 증가 등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관점(feminist perspective)에서 노년기 여성의 가족돌봄일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중 노년기 배우자 돌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여성노인의 배우자 돌봄 현황<sup>2)</sup>

### 1) 배우자를 돌보는 이유 및 돌봄 현황

여성노인들은 대체로 노년기 배우자 돌봄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고, 대부분의 경우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배우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배우자 돌봄은 대체로 배우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되고, 본 조사에 포함된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들은 대부분(82.0%)이 거의 매일 돌봄을 수행하며, 일주일 중 하루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의 돌봄시간은 1일 평균 9.55시간(표준편차: 6.43), 주당 평균 65.03시간(표준편차: 45.30)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를 돌본 기간은 평균 40.66개월(표준편차: 38.51)로 나타났다.

### 2) 배우자 돌봄 시 주변 도움과 부양부담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볼 때 가족, 친구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정기적인 조력자가 없다는 응답(67.0%)이 많았으며, 조력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돌봄시간이 여성노인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또한, 여성노인이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있어 일시적으로 배우자를 돌볼 수 없을 때에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16.3%로 나타나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를 돌보며 경험하는 부양부담 중 신체적, 정서적 부양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경제적 부담의 경우 다수의 여성노인이 배우자가 생계활동을 못하게 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적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상황이 더욱 열악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의 상당수가 배우자를 돌보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75.0%),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으며’ (65.7%),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56.3%)고 응답하였고, 48.0%가 ‘배우자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돌보는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돌봄시간이 길수록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외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현황

외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현황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

2) 설문조사(n=300)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조사형식으로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음.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여성노인 중 일상생활수행능력에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배우자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돌보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음. 심층면접은 동일한 성격의 여성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3)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48.7%), ‘배우자가 내가 돌봐주길 원해서’ (42.0%), ‘내가 돌보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38.7%)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여성노인들은 서비스 이용 후 경제적 부담 수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담(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가족갈등 등)이 상당 수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 4) 현재 하고 있는 돌봄일에 대한 평가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들은 배우자를 돌보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돌봄일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하고 있는 배우자 돌보는 일을 사회적 직업으로 정했을 경우 월평균 약 91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함의

연구결과, 많은 여성노인들이 가족돌봄일에 대해 상당수준의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생애사 전반에 걸쳐 ‘양육자, 돌봄자’로 사회화 되어 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만 둘 수 있다면 그만 두고 싶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어 노년기 가족돌봄이 여성노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노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노인돌봄 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현재 정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경제적·도구적·심리적 부양에 일정부분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 여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등이 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을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012).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나, 수급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정(1-3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2a).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월 27시간/36시간) 또는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방문서비스 27시간형에 해당/12일-방문서비스 36시간형에 해당)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를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변·활동지원서비스(예: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와 가사·일상생활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가 제공된다.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12a).

노노케어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형태 또는 소득수준에 의해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생활가사지원, 심리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2b).

전술한 제도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을 제공하여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급여,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경우 지원자격이 엄격하여 실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는 대단히 제한적<sup>4)</sup>이며, 대부분의 가족돌봄자들은 특별한 지원 없이 노인을 돌보게 된다. 이에, 가족돌봄자를 위한 보다 보편적인 지원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적 함의

본 연구 결과, 많은 여성노인들이 상당수준의 가족돌봄일(care work)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양부담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제도이용 현황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제도 이용이 여성노인의 부양부담 경감에 상당 수준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바, 노인돌봄 관련 공적 지원체계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제안한다. 따라서, 기 시행 중인 노인돌봄 지원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 이용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여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볼 때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노인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지원체계는 수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비공식 가족돌봄자를 위한 보다 보편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예: 건강지원 프로그램, 교육 및 정서적지지 서비스 등)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제도를 노인돌봄까지 확장하여 개인이 모든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가족생활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공식 가족돌봄에 대한 적정선의 사회적 보상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2c). 2011 보건복지백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2012).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 Hooyman, N.R., & Kiyak, H.A.(200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8th eds).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보건복지부(2012a). 2012년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2b).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노케어 중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이용자수가 전체 노인수 대비 6% 미만임(보건복지부, 2012c).

#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패널 분석

김영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특정 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의 사업담당자가 작성한 사업별 성인지예산서를, 기획재정부가 단순 취합한 형태로 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인 성별 자원배분의 총괄적인 추이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해결 방안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사업별 성인지예산서 또한 성별분리 통계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성별 편차 원인 및 대안 마련 등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서 DB 구축 및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통해 단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분석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사업에 대한 시계열 분석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서의 성별수혜정보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성별 자원배분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성과를 계량화하고자 한다.

## 성인지 예산서 패널 분석

패널자료의 구축에 앞서 성평등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성인지예산제도가 의도하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정보를 가지고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방법과 과정을 서술했다.

구축한 자료를 계량경제학의 패널자료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별 자원배분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데이터 클리닝 과정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기간이 다른 패널자료 2종을 구축했다. 첫 번째 자료는 2012년 성인지예산서를 기준으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2009~2011년까지 3개년간의 성별수혜통계를 구축한 패널자료이다. 두 번째 자료는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기준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정보를 통합하여, 2008~2011년까지 4개년간의 성별수혜통계를 구축한 패널자료이다. 두 개의 자료를 구축하면서 발견되는 작성오류 항목을 분석하고, 자료의 신뢰도 추이를 파악했다.

또한, 구축한 자료를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별 자원배분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이며 피설명변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변수라고 할 수 있는 여성수혜자 비율이다.

##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데이터 클리닝 개요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3개년 자료		4개년 자료	
내 용		2009~2011년 성별수혜통계		2008~2011년 성별수혜통계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li> <li>•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li> <li>•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li> <li>•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li> </ul>	
구 분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전 체		214개	100.0%	130개	100.0%
데이터 보정이 필요한 사업	소 계	138개	64.5%	100개	76.9%
	보정 가능	81개	37.9%	29개	22.3%
	보정 불가능	57개	26.6%	71개	54.6%
데이터 보정이 필요 없는 사업		76개	35.5%	30개	23.1%

패널분석 결과, 성인지예산서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서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될 때마다 담고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보정한 후 패널자료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자료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제도 출범과 함께 진행해 온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작성 공무원에 대한 컨설팅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향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향후 성별수혜통계의 작성오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통한 대표성 증진방안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번 제19대 총선결과 여성당선자는 총 47명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들은 총선 시작과 함께 ‘여성 공천’을 개혁 화두로 올리며, 15~30%까지 지역 여성할당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당 지도부의 공약이 무산된 가운데 19대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제18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13.7%)보다 조금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이에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 공천과정을 조사하여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적 대표성 증대 논의에서 제1차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통로로 지적되는 것이 각 정당의 공천 과정 및 제도에 관한 것이다. 실제 선거에서 여성의 당선율이나 경쟁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에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 차원에서의 공천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19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공천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 설문조사를 통한 19대 총선 과정에서의 여성 후보 공천 문제점 분석

본 연구에서는 19대 총선을 통해 여성 후보 공천의 전반적인 과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총선 후보자로서 겪는 공천 과정 경험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고자 19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여성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7명(54.7%)이 응답하였다. 이 중 공천자는 33명이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정치적 계파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먹기’(평균값 4.17) 항목이 가장 영향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조직 및 자금력’(평균값 3.13), ‘소속 정당에 대





한 기여도' (평균값 2.78), '경력과 전문성' (평균값 2.61), '지역기반 및 지역구 활동' (평균값 2.54), '의정활동 실적' (평균값 2.43), '여성공천 의무 할당' (평균값 2.19) 등의 순위를 보였다. 그런데 낙천자는 정치적 계파가 가장 큰 영향을, 다음으로 조직 및 자금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반면 공천자는 경력과 전문성, 여성 공천 의무 할당,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투명한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 1순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2.1%가 '지역구 여성 후보 의무 할당제 법제화'를 선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공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과정 내용 공개' (10.3%), '정당 내 주요 당직에 여성 할당제 도입' (9.2%), '비례대표 50%까지 확대' (5.7%) 등의 순위를 보였다.

### 공천 유형별 사례조사를 통해 본 19대 총선 여성 공천의 문제점

공천자와 낙천자별, 그리고 단수공천, 전략공천, 경선 방식에 따라 새누리당 6건, 민주통합당 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파챙기기와 돌려막기식 공천이 눈에 띄었다. 객관적 지표 부재 및 납득되지 않는 당의 해명 등이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된 바 있으나, 공천이 당내 권력구도 및 경쟁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쇄신안은 유아무야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대 총선에서 경선은 여성 후보들의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력으로 인해 여성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의 서울 강남을과 서울 마포을 사례는 경선제가 결국 지역적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지역에 인지도가 있는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을 드러낸 경우이다.

### 결론 및 방안 모색

결론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와 관련하여 양 정당이 보여준 공천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누리당은 차기 대권 구도 및 권력관계 정리 차원에서 계파를 고려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정당의 민주화 및 정체성 연계를 보여주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기 대권 도전 후보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강화시키고자 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상향식보다는 하향식 공천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에 정(正)의 작용을 하였고, 상향식 공천은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여성 및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 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대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여성신인 및 정치인들에게 지역 정서,

당의 비강세 지역 등에 의해 높아졌던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와 관련,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및 양성평등의식 교육강화 그리고 여성 역량을 고려한 공천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안) 도입 등 여성친화적 공천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선제 혹은 상향식 공천방식이 밀집공천 및 계파안배공천 등의 폐해를 막고, 정치신인 혹은 특정계파 소속이 아닌 자 등 소수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력 동원보다는 정책 및 인물 역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경선방식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우선 유권자의 참여가 후보자의 조직동원력에 기반하지 않고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후보자의 조직동원력보다는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론조사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민정. 2002. “후보공천방식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여성연구논총』17. 3-31.
- 정진민. 2004.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상향식 공천제도와 예비후보등록제.” 『한국정당학회보』 3(2). 5-18.
- 윤종빈. 2012. “19대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2012년 한국정당학회 19대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 195-227.
- 황아란. 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 연구.” 『한국정치학회보』36(1). 203-222.